

보안과제(), 일반과제(O) / 공개(O), 비공개()

과제번호(2019-013)

2019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Research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consultation committee o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과제(), 일반과제(O) / 공개(O), 비공개()

과제번호(2019-013)

2019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Research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consultation committee o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2.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 김 동 현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김 성 진 연구위원

박 정 일 연구위원

오 서 연 연구원

김 도 연 위촉연구원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CG19042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9. 2. 11 ~2020. 2. 10	단계구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2019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중과제명				
	세부과제명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연구책임자	김동현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5명 내부 : 4명 외부 : 1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60,000 천원 계 : 6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정책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input type="checkbox"/> 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다양한 정책현안 발굴, 정책 대안 마련 및 정책 조정역할 수행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요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행계획/추진실적(안) 마련 및 지방과학기술진흥 협의회를 통한 심의·확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 지역R&D 사업 및 예산 배분 조정 관련 의견제시를 통한 지역R&D정책의 실효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정책 및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지방과학기술 R&D 사업 검토 의견을 예산 배분·조정 시 제시하여 지방과학기술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지방협의회에서 심의·조정 된 안건·자료 등을 지자체에 배포·확산하여 지역혁신정책에 활용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방R&D정책, 지방R&D예산, 지역R&D 체계, 지자체 R&D역량			
	영어	Committee on Regional S&T Promotion, Regional R&D Policy, Budget, System, Capability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개요	3
	제2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4
제2장	연구결과	9
	제1절 3기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1
	제2절 3기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2
	제3절 3기 제7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5
	제4절 4기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9
제3장	기대효과	23
붙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27
	[붙임 1] 3기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29
	[붙임 2] 3기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37
	[붙임 3] 3기 제7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51
	[붙임 4] 3기 제7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57
	[붙임 5] 4기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83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개요

□ 연구목적

-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정책의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 설정
-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다양한 정책현안 발굴, 정책 대안 마련 및 정책 조정역할 수행
 - 지역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자체의 R&D 기획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발굴

□ 연구내용

-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 운영을 통한 주요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심의
 - 과기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행계획/추진실적(안) 마련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를 통한 심의·확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 운영 내실화
 - 지역R&D 사업 및 예산 배분 조정 관련 의견제시를 통한 지역R&D정책의 실효성 제고

□ 기대효과

-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 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 운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정책 및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지방과학기술 R&D 사업 검토 의견을 예산 배분·조정 시 제시하여 지방과학기술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지방협의회에서 심의·조정 된 안건·자료 등을 지자체에 배포·확산하여 지역혁신 정책에 활용

□ 연구추진체계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조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심의를 수행
 - KISTEP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사무처 지원을 통해 지방협회의의 효과적 운영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시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안건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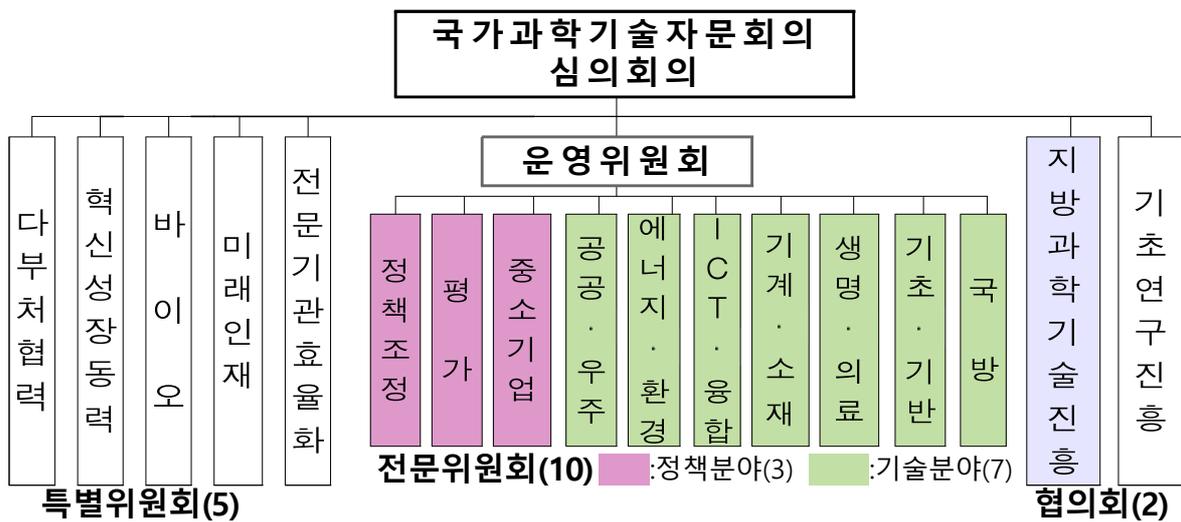
제 2 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 조직구성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체** 중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회의의 산하 협의회
 - * 종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합하여 출범('18.1)
 - **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성

□ 위원구성

- 각 지자체(시·도)의 추천을 받아 과기정통부장관이 위촉한 지역별 외부 전문가(임기 2년)와 정부위원(과학기술정책국장)



[그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체계도

□ 법적근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 주요기능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조정 및 심의
-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자체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

□ 위원 및 운영 현황

- 지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17년도 12월에 3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의 지역, 산학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1명으로 위촉 (임기 : 2017.12.12. ~ 2019.12.11.)
 - 제7차까지 회의를 개최함

<3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서면심의	-	1	1
대면심의	1	2	2
심층분석 TF(대면)	-	3	-
워크숍	-	1	-

<3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순번	지역	성명	경력
1	충남	김정윤(남)	충남대학교 미생물분자생명 학과 교수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전문위원
2	충북	김미혜(여)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3	경기	김민선(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
4	세종	김영준(남)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전국식품공학교수협의회 사무총장
5	서울	김진영(여)	KIST 환경복지연구단장
6	제주	김창숙(남)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7	전남	김치연(여)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컴퓨터공학과 교수 한국정보기술학회 이사
8	대구	김현덕(남)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노베리옵틱스 선임연구원
9	경기	박승희(남)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전자부품연구원 겸임연구원
10	울산	배성철(남)	UNIST 생명과학부 교수(산학협력단장)
11	대전	부하령(여)	생명연 책임연구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12	강원	양현옥(여)	KIST(강릉분원) 천연물융합센터 책임연구원
13	광주	유진철(남)	조선대학교 약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14	인천	이민섭(남)	인천대학교 융합기술원 초빙 교수 (주)이원다이애그노믹스 공동대표
15	충남	이부형(여)	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16	경북	이소영(여)	시현코리아 대표
17	강원	이혜영(여)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단장
18	전북	설경원(남)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19	부산	정석찬(남)	동의대학교 지능정보연구소 소장
20	경남	조유섭(남)	(재)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원
21	대구	최경주(남)	계명대학교 전자무역학과 교수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 본부장

- 2019. 12. 11. 임기가 종료하여 2019년도 12월에 4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 (임기 : 2019.12.12. ~ 2021.12.11.)

<4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순번	지역	성명	경력
1	전북	설경원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2	서울	김상경	KIST 대외협력본부장, 책임연구원 국과심 정책조정전문위원
3	부산	김병진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부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부위원
4	대구	송규호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
5	인천	심상미	(주)파버나인 의료헬스사업부 연구소장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일자리 정책위원
6	광주	한은미	전남대학교 부총장/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수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
7	대전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8	울산	배성철	UNIST 생명과학부 교수(산학협력단장) 울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
9	세종	박소아	(주)다음소프트 스마트센터장 과기정통부 IITP 기술평가 심의위원
10	경기	박승범	호서대 스마트팩토리학과 교수 호서대 제조빅데이터센터장
11	강원	양현욱	KIST(강릉분원) 천연물융합센터 책임연구원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12	충북	홍진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장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위원
13	충남	장영주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교수 과기정통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14	전남	이종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장 전남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15	경북	하정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16	경남	조유섭	(재)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 경남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17	제주	박남제	제주대학교 융합정보보안학과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제 2 장

연구결과



제 2 장 연구결과

제1절 3기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03. 14(수)
- 장 소 : 온라인 서면 심의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19	김정윤(위원장), 조유섭, 설경원, 김진영, 김미혜, 김민선, 김창숙, 김치연, 김현덕, 박승희, 배성철, 부하령, 유진철, 이부형, 이소영, 정석찬, 최경주, 양현옥, 이해영

□ 심의 안건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8년도 실적점검 및 '19년도 시행계획(안)

2 안건처리 결과

구 분	호수	안 건 명	제출자 (발표자)	처리결과
심의	1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8년도 실적점검 및 '19년도 시행계획(안)	과기부	원안의결

※ [붙임 1]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회의자료 참고

제2절 3기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5(금) 15:00 ~ 17:00

□ 장 소 :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협의회 위원	14	김정윤(위원장), 김민선, 박승희, 조유섭, 유진철, 최경주, 부하령, 정석찬, 김영준, 배성철, 이민섭, 설경원, 이부형, 김미혜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	4	류광준 국장, 윤경숙 과장, 온정성 사무관, 이소담 주무관
KISTEP 지역정책팀	4	김성진 팀장, 천세봉 연구위원, 김동현 부연구위원, 임주왕 연구원

□ 심의 안건

- 「지역R&D 체계 개편 방안(안)」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개회(성원보고 등)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
15:05~15:10 (’5)	■ 위원장 인사말씀	■ 지방협의회 위원장
15:10~15:15 (’5)	■ 과학기술정책국장 인사말씀	■ 과학기술정책국장
15:15~15:40 (’25)	■ 「지역 R&D 체계 개편 방안(안)」	■ 과학기술전략과장
15:40~17:00 (’80)	■ 토의 및 질의·응답	■ 참석자 전원
17:00	■ 폐회	■ 지방협의회 위원장

2 안전처리 결과

구 분	호수	안 건 명	제출자 (발표자)	처리결과
토의	1	「지역R&D 체계 개편 방안(안)」	과기부	원안토의

※ [붙임 2] 「지역R&D 체계 개편 방안(안)」 회의자료 참고

3 주요 논의 내용

□ 지역R&D 기준정립 및 관리 관련 논의

- 지역에 대한 현실적이며 명확하고 정량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
 - 지역R&D의 기준 제시를 통해 지역R&D 사업목록을 만드는 것도 많은 의미를 포함
 - 성과기준으로는 산업성장, 고용창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고 평가기준 및 보상기준을 두어 효율적인 연구비의 집행이 필요
- 가이드라인을 통한 관리 및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자체가 예산을 받더라도 모두 관리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되므로 관리기관의 “자문”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
 - 조사분석 및 수요분석을 통해 중복성을 피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기획위나 평가위의 승인을 받는 형태가 타당해 보임
- 일부지역(부산, 경기)에서 독립적인 기획평가단을 자체 예산으로 유지 및 진행하고 있으나 자체예산으로는 독립이 어려운 상황
 - 지자체에서 해당 기획평가단에 대해 꾸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 범부처에서 사업단위별로 하는 사업들은 위원회 고시로 지정을 통해 포괄보조금 등의 나눠 먹기식 분배는 지양

□ 지역R&D사업 추진체계 개편 관련 논의

- 전달체계 개편의 경우 전문기관입장에서는 옥상옥일 수 있으며 예산기획부분에서 지자체 참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지자체를 통해 하는 이유는 지역R&D의 주도권을 지역이 가지고 추진해야하며, 현재 전문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고 예산기획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 줄 필요가 있음
- 또한, 과학기술분야에 지역특성을 배제하지 않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비R&D 사업과도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존재(관련 산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 이와 함께, 정부부처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집행 및 관리 할 해당 조직의 필요성 인식도 중요
-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게 목적이지만 지자체의 특성 반영을 위해 그리고 불균형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R&D를 잘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지역에 예산만 배분한다고 지역 R&D 역량이 성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누어 먹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 가능
 - 우선 각 지역의 R&D 역량을 키우기 위한 부분도 같이 고려 필요
 - 또한, 지자체 역량으로는 기획부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기획 등을 할 수 있는 완충적 단계 필요

□ R&D·혁신 거버넌스 재정비관련 논의

- 위원회의 구성도 보다 더 전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도시행정, R&D거버넌스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확대할 필요
 - 대학교수 위주로 이루어진 위원회보다는 지자체도 함께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여 지역혁신기관 및 전문기관도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면 효율적인 운영 또한 기대
 -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배석 및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추가 지정을 통해 지자체에 협의회 논의 내용 전달 효과 제고 기대
 - 이에, 지역분야 관련 사회과학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자문회 확대에 대해서 검토 예정
- 연지단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일부는 관리기관)의 사업기획·발굴·관리 등과 관련된 모든 예산 정보를 연지단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 지자체별로 협의회 및 추진단들의 담당과가 달라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연지단을 전담으로 운용할 부서 지정 필요

제3절 3기 제7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11(금) 13:30 ~ 15:00
- 장 소 : 서울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협의회 위원	18	김정운(위원장), 이해영, 양현욱, 김민선, 박승희, 조유섭, 유진철, 부하령, 정석찬, 김진영, 배성철, 이민섭, 김미혜, 설경원, 최경주, 이소영, 김창숙, 김영준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	3	류광준 국장, 윤경숙 과장, 온정성 사무관
KISTEP 지역정책팀	4	변순천 본부장, 김성진 팀장, 김동현 부연구위원, 김도연 연구원

□ 심의 안건

- 「지역R&D 체계 개편 경과보고」
- 「20년 지역R&D 예산 관련 지방협의회 의견 제시 결과」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개회(성원보고 등)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
13:30~13:35 ('5)	■ 위원장 인사말씀	■ 지방협의회 위원장
13:35~13:40 ('5)	■ 과학기술정책국장 인사말씀	■ 과학기술정책국장
13:40~13:50 ('10)	■ (1호) 「지역 R&D 체계 개편 경과보고」 ■ (2호) 「20년 지역R&D 예산 관련 지방협의회 의견 제시 결과」	■ 과학기술전략과장
13:50~15:00 ('70)	■ 토의 및 질의·응답	■ 참석자 전원
15:00	■ 폐회	■ 지방협의회 위원장

2 안건처리 결과

구분	호수	안건명	제출자 (발표자)	처리결과
토의	1	지역R&D 체계 개편 경과보고	과기부	원안토의
토의	2	'20년 지역R&D 예산 관련 지방협의회 의견 제시 결과	과기부	원안토의

※ [붙임 3] 「지역R&D 체계 개편 경과보고」 및 [붙임 4] 「'20년 지역R&D 예산 관련 지방협의회 의견 제시 결과」 회의자료 참고

3 주요 논의 내용

1. 지역 R&D 체계 개편 경과보고

□ 정부 R&D 성과를 통한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육성에 대한 방안 추가 고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성과로 개발된 기술들이 지역에 잘 녹을 수 있는 분야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라고 생각되며 해당 부처들 간 연계·협력 필요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2019년 사업인 “스마트어린이집 모델”의 경우, 기술개발을 건축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R&D 영역 간 체계적 협업이 이루어지면 지역과 기업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새로운 스타트업의 발굴과 동시에 기존 스타트업과 연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중기부, 과기부가 만들기를 희망
- 과거 기술을 활용한 사업성과 파악 및 현 시점 기준 시장화 적정기술 발굴,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기술 공유 등으로 성과 제고 지향
- 지역의 연구인력 유출 등으로 연구소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인력 유치 방안 마련 필요

□ 지역혁신협의회 역량 제고 노력 필요

- 지역혁신협의회는 현재 역량으로 미루어 종합계획 수립 주관 및 지역 R&D 역량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 ‘지역R&D 혁신거버넌스’ 재정비 관련, 지방의 종합계획 수립 주체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아닌 시·도가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또는, 지역혁신협의회보다는 TP 중심 조직이 지역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지역 R&D 인프라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지역혁신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혁신전문기관 지정 관련 제고 방안 논의

- ‘지역혁신종합계획 수립’ 관련 지역별 가이드라인이 획일적이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어 지역의 자율성 고려 필요
 - 또한, 지역혁신종합계획이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으려면 지역산업진흥계획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등의 조치가 필요
- 지역전문기관 지정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지, 중앙정부가 조정해서 지자체에 제시할지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지역에서 혼란 우려
 - 또한, 지역 전문기관이 실질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고, 기획 및 운영과 평가 기능 분리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역할 확립 및 기능 확대 필요

- 각 시도별 지역혁신종합계획 수립 참여 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역할 부여 필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지역혁신종합계획 수립시 적용 필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지역혁신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는 할 수 없으나, 자문 기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능 확대 및 지역R&D 역량 파악을 위해서 각 위원들에게 담당 지역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토록 과제를 주고 협의회 개최시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 필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균형위 간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형태로 협의회 기능 확립 요망
 - 초창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와 불분명한 역할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의견들이 종합계획 및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에 반영되는 등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생각
- 또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지역과학기술진흥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한 내용을 정부 부처가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2. '20년 지역R&D 예산 관련 지방협의회 의견 제시 결과

□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심의, 조정에 대한 역할 확립 필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전문위원들이 국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부처사업설명회시 질의할 수 있도록 부처사업설명회 이전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들의 예산 배분·조정 의견을 서면으로 전문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프로세스 확립 필요
 - 또한, 현재는 집행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확대된 R&D예산이 지역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
- 다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지역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갖는다면 각 위원의 지역이익 대변과 이로 인한 갈등은 우려

제4절 4기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 20(월) 15:30 ~ 17:00

□ 장 소 : 서울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협의회 위원	15	설경원(위원장), 김상경, 김병진, 심상미, 한은미, 고영주, 배성철, 박소아, 양현옥, 홍진태, 장영주, 하정희, 조유섭, 박남제, 이종호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	4	류광준 국장, 윤경숙 과장, 온정성 사무관, 이미애 주무관
KISTEP 지역정책팀	4	변순천 본부장, 김성진 팀장, 김동현 부연구원, 김도연 연구원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35 (5')	■ 개회 및 인사말씀	과학기술정책국장
15:35~15:55 (20')	■ 위촉장 수여	과학기술정책국장
15:55~16:20 (25')	■ 위원장 인사말씀 및 위원 소개	위원장 및 참석 위원
16:20~16:30 (10')	■ 협의회 목적 및 역할, 주요 활동 소개 ■ 2020년도 협의회 주요 계획 안내	과학기술전략과장
16:30~17:00 (30')	■ 토의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7:00	■ 폐회	지방협의회 위원장

2 안건처리 결과

구분	호수	안건명	제출자 (발표자)	처리결과
토의	1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현황 및 2020년 운영계획(안)	과기부	원안토의

※ [붙임 5]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현황 및 2020년 운영계획(안)」 회의자료 참고

3 주요 논의 내용

□ 지난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운영 및 지역R&D 추진체계 관련 논의

- 3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한계가 존재
- 과기부 지역예산이 산업부나 중기부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호응이 많지 않음
- 또한, 중기부, 산업부 등에 R&D 과제 및 예산이 분산되어 있으며,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종합하기 어려움
 - 부처 간 협업 관계 설정 및 통합에 대해서 혁신본부의 역할이 필요
- 지역과학기술위원회나 총괄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 산하로 들어가는 등 지역혁신협의회 조직 재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고민이 필요
 - 영국의 경우, 중앙부처의 지역 담당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지역혁신 방향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거버넌스, 문화적 측면 고려 필요)
 - 지역과학기술위원회나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자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회의체인데, 균형위나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고 있는 등 지자체의 개선방안 수용 준비가 아직은 부족
 - 과기정통부 및 혁신본부,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필요
- 과기정통부가 지역 및 사회혁신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한 전략을 생산하고, 이를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 등과 출연연 지역조직들의 방향성 연계 필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역 출연연 조직들이 8개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R&D, 산업혁신을 위해 노력

-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역성장 범부처 패키지사업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 가이드라인이나 목차에 각 부처(중기부, 산업부, 과기부)사업이라고 되어 있어, 지역자율 기획이라는 본래 취지가 흐려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경우 지방과학기술진흥 자체에 중심을 두고 추진이 필요
 - 다른 지역관련 계획들과 차별화 필요
- 지역혁신협의회 정비, 위원회 운영 구성에 대하여 균형위에서 진행 중이나 시도마다 차이가 존재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구성 및 지역혁신 관점에 대해 균형위와의 논의를 추진
-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역R&D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균형위가 추진 중이나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추진이 어려움
 - 안전 취지 반영을 위해 노력 중

□ 4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 방향 및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 제시

- 각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노하우 등을 교류할 수 있는 공유의 장으로서의 운영 필요
 - 각 지역 사람이 모인 협의회인 만큼 여러 지역의 의견이 교류되기를 기대하며, 협의회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많은 소통을 바람
 - 산업계의 경우 기업 현장에서의 R&D 상용화에 대한 의견 공유를 위해 노력
 - KIST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협력 및 학연 협력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 공유를 위해 노력
 - 지역R&D전담기관이나 지역 내 과학기술거버넌스에 대한 의견 공유 필요
 - 각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이 협의회와 함께 협업하는 모형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 포용적 기술혁신성장을 과학기술로 표현하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민과 지역차원의 국제협력 및 해외비즈니스에 대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연계하여 논의하기를 바람
 - 지역차원의 해외인재 유치 방안 등 지역차원에서 가능한 국제협력 사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역할 강화 노력 필요
 -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협의회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강화 비전 제시 등의 역할 수행 필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혁신본부가 지방과학기술진흥관련 내용들의 공유 활성화 및 협의회 위원들의 역할 설정 추진 필요



제 3 장

기대효과



제 3 장 기대효과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R&D 역량 강화

- 지방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한 지역별 특화 전략으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 특히, 2019년 12월 기존 3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2019년도 12월에 4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3기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더하여 새로운 사업과 의견들의 제시로 지역의 R&D 역량 강화 기대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효과성 제고

- 지방 협의회 운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정책 및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특히, 지방과학기술 R&D 사업 검토 의견을 예산 배분·조정 시 제시하여 지방과학기술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상호 공유의 기회 확대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방협의회에서 심의·조정 된 안건·자료 등을 지자체에 배포·확산하여 지역혁신 정책에 활용

□ 지방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자체 간 과학기술진흥분야(담당자)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의 개최를 통해 중앙-지자체 간 정책협력네트워크 강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붙임 1

3기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9. 3. 14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 출 자	지자체 및 관계부처 합동
제출 연월일	2019. 3. 14.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9. 3. 14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 출 자	지자체 및 관계부처 합동
제출 연월일	2019. 3. 14.

1. 의결주문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이하 ‘종합계획’)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실적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매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주요내용

가. 제5차 종합계획 2018년도 추진실적

□ (총 투자실적) 4조 5,055억원 투자 집행

- '17년 실적(4조 6,000억원) 대비 2.1% 감소,
'18년 계획(4조 7,873억원) 대비 달성률 94.1%
- 재원별 비중은 국비(2조 884억원) 46.4%, 지방비(1조 6,048억원) 35.6%, 기타 민간(8,123억원) 18.0%로 국비 비중이 가장 높음

《 '18년도 재원별 투자 계획 및 실적 》

(단위: 억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	합계
계 획	21,487	17,450	8,937	47,873
실 적	20,884	16,048	8,123	45,055
(계획 달성도)	(97.2)	(92.0)	(90.9)	(94.1)

* 지방비는 17개 시·도 예산과 시·군·구 예산을 합산

** 기타민간은 민간투자 및 비영리기관

□ (지역별) 17개 지자체 중 경북(5,360억원), 충북(3,973억원), 대구(3,832억원) 순으로 투자가 많음

《 '18년도 지역별 계획대비 투자 실적 》

(단위: 억원, %)

지역	계획	실적	(달성도)	지역	계획	실적	(달성도)
서울	3,955	3,554	(89.9)	강원	809	679	(84.0)
부산	3,866	3,639	(94.1)	충북	4,076	3,973	(97.5)
대구	4,354	3,832	(88.0)	충남	1,811	1,785	(98.6)
인천	542	541	(99.8)	전북	3,420	3,712	(108.5)
광주	3,682	3,709	(100.7)	전남	2,219	2,281	(102.8)
대전	2,777	2,293	(82.6)	경북	5,495	5,360	(97.5)
울산	2,875	2,626	(91.4)	경남	4,054	3,372	(83.2)
세종	580	541	(93.3)	제주	1,390	1,257	(90.4)
경기	1,970	1,899	(96.4)	합계	47,873	45,055	(94.1)

□ (중점추진과제별)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1조 175억원, 22.6%) 및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9,023억원, 20.0%)에 투자 집중

- 정책·제도개선 성격을 갖는 'R&D 기획·평가역량 확충'(780억원), '중앙정부 지원체계 개선'(151억원)은 투자규모가 작음

《 '18년도 9개 중점추진과제별 계획 대비 투자 실적 》

(단위: 억원, %)

3대 부문	중점 추진과제	계획	실적	(달성도)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1. 지역의 R&D투자 결정권 강화	4,541	4,489	(98.9)
	2.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	707	780	(110.3)
	3.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223	151	(67.7)
지역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4. 지역거점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5,077	4,886	(96.2)
	5.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5,350	5,314	(99.3)
	6.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8,882	9,023	(101.6)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7.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6,598	6,350	(96.2)
	8.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4,358	3,888	(89.2)
	9.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12,136	10,175	(83.8)

□ 중점추진과제별 시사점

- (지역혁신리더십 구축) 지자체의 자체기획사업 투자비중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주도적 역할 강화 추세

* 지방비 중 자체기획사업 투자비중(%): ('17년) 32.4 → ('18년) 42.9

- 다만,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이 감소*하는 등 지역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활동이 다소 위축

* 평균 개최횟수: ('16년) 1.29 → ('17년) 2.76 → ('18년) 0.94

⇒ 자체기획사업 내실화를 위한 싱크탱크 강화, 거버넌스 내실화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관련 예산 통합·확대 등 필요

- (지역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혁신주체에 대한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산업관련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기술지원 분야 투자 대폭 확대*

* 기업지원 및 기술이전 관련 투자(억원): ('17년) 8,219 → ('18년) 10,035

⇒ 혁신주체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출연연 분원 등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지역혁신성장체계 고도화) 지역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혁신역량 극대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 기반조성 투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연구개발강소 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적극 추진으로 향후 대폭 확대 전망

* 기반조성 관련 투자(억원): ('17년) 16,433 → ('18년) 15,796

⇒ 예산의 외형적 확대에서 더 나아가 현장체감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운영체계 마련 필요

나. 제5차 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 (총 투자 계획) 총 투자규모 4조 8,939억원

- '18년 투자실적(4조 5,055억원) 대비 7.9% 증가한 수준
- 재원별 비중은 국비(2조 2,153억원) 45.3%, 지방비(1조 7,904억원) 36.6%, 기타 민간(8,882억원) 18.1%이며 증가율은 지방비가 가장 큼

《 '18년 대비 '19년도 재원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재 원	'18 투자실적		'19 예산(안)		증 감	
	투자규모(A)	(비중)	투자규모(B)	(비중)	투자(B-A)	(증가율)
국 비	20,884	(46.4)	22,153	(45.3)	1,270	(5.7)
지 방 비	16,048	(35.6)	17,904	(36.6)	1,856	(10.4)
기타민간	8,123	(18.0)	8,882	(18.1)	758	(8.5)
총 합 계	45,055	(100.0)	48,939	(100.0)	3,884	(7.9)

* 지방비는 17개 시·도 예산과 시·군·구 예산을 합산 ** 기타민간은 민간투자 및 비영리기관

□ (지역별) 17개 지자체 중 경북(8,110억원), 경남(4,217억원), 광주(4,143억원) 순으로 투자 계획규모가 큼

- 17개 시·도의 평균 투자규모는 2,879억원이며 평균적으로 국비 1,303억원, 지방비 1,053억원, 기타 민간 522억원
- 순수 지방비만 투자된 지자체 자체 기획사업(8,375억원)의 규모는 전체 지방비 투자의 46.8%에 해당

* 서울(2,028억 원, 98.7%), 경기(1,081억 원, 86.5%)는 자체 기획 사업에 지방비를 투자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19년도 17개 시도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지역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	합계	지역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	합계
서울	702	2,056	385	3,143	강원	326	561	27	914
부산	1,944	1,049	394	3,387	충북	1,631	1,026	286	2,943
대구	2,224	981	677	3,881	충남	1,011	865	212	2,088
인천	86	283	29	397	전북	2,360	1,211	506	4,077
광주	2,158	1,456	529	4,143	전남	1,211	835	220	2,267
대전	1,439	1,432	299	3,170	경북	2,234	1,439	4,437	8,110
울산	1,762	775	206	2,743	경남	1,874	1,826	517	4,217
세종	249	176	5	430	제주	537	683	25	1,245
경기	407	1,251	127	1,784	합계	22,153	17,904	8,882	48,939

- (중점추진과제별)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1조 3,224억원, 27%) 및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9,737억원, 19.9%)에 투자계획 집중

《 '19년도 9개 중점추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3대 부문	9대 중점 추진과제 계획	'18년 실적	'19년 계획	(비중)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1. 지역의 R&D투자 결정권 강화	4,489	3,569	(7.3)
	2.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	780	801	(1.6)
	3.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151	272	(0.6)
지역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4. 지역거점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4,886	5,133	(10.5)
	5.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5,314	5,459	(11.2)
	6.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9,023	9,737	(19.9)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7.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6,350	6,454	(13.2)
	8.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3,888	4,289	(8.8)
	9.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10,175	13,224	(27.0)

- (사업유형별) 기반조성(2조 676억원, 42.2%), 기업지원 및 기술이전 (9,752억원, 19.9%), 기술개발(8,808억원, 18.0%)에 중점

《 '19년도 사업유형별 투자 실적 및 비중 》

(단위: 억원, %)

구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기술이전	기관지원	기반조성	정책개발	합계
투자 계획 (비중)	8,808 (18.0)	3,760 (7.7)	9,752 (19.9)	5,335 (10.9)	20,676 (42.2)	609 (1.2)	48,939 (100.0)

붙임 2

3기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본 안건은 내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임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편 방안(안)

2019. 4.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 서

I. 검토배경	39
II. 현황 및 문제점	40
III. 추진방안	45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45
2. 지역R&D 기준 정립 및 관리	46
3. 지역R&D 사업 추진 체계 개편(안)	48
4. R&D · 혁신 거버넌스 재정비	49
IV. 향후 추진계획	50

I. 검토배경

- (국정기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간 경제격차를 완화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 핵심적인 국정과제로서 제시
 -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지역주민 생활·복리와 밀접히 연관된 지역밀착형 사업 지방 이양
 -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자립적 혁신성장 기반마련을 구현하기 위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 수립('19.1)
- (R&D 정책방향) R&D 분야도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R&D 기반 구축 등 정책방향 발표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목표로 지역과학기술 혁신방안을 종합,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수립('18.2)
 - * (3대 전략) ①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② 지역 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③ 지역혁신성장체계 고도화
 - R&D 투자방식 개편* 등 구체적인 지역주도 R&D 강화 방안을 포함한 「국가R&D 혁신방안('18.7)」 발표

-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지역R&D 재원을 연계·개편, 지역수요에 맞추어 **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각 지역의 R&D 지원기관을 통한 전달체계도 연계·개편 검토
- (대내외 인식) 국정감사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R&D 정책의 필요성 의견 제기('18.10)
 - VIP도 지역R&D를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 의지 표명('19.1)

- “지역R&D 사업을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하여 지자체가 지역R&D 사업을 기획·제안하고, R&D 수행의 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I.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R&D 추진현황

① [중앙부처 지원] 산업부·중기부·교육부·과기부 중심, 최대 3.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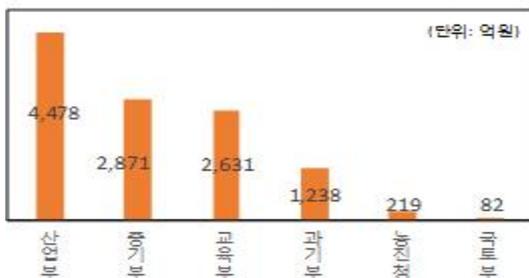
- (규모) 국가 R&D('17년 19.4조원) 중 지역혁신 등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R&D는 재원 기준*으로 판단시 최대 3.3조원 규모로 추정

* 균특회계 R&D(1.2조원) + 타 회계 R&D 중 지자체가 재원을 매칭하는 사업(2.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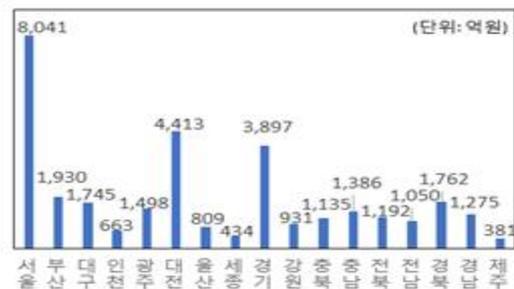
- (배분) 부처*는 과기부·산업부·교육부·중기부(87.8%), 지자체는 서울·경기·대전(50.2%) 비중이 높음

* 균특(1.2조원)으로만 한정시 산업부(38.9%), 중기부(24.9%), 교육부(22.8%), 과기부(10.7%) 순

< 부처별 규모(균특회계 한정) >



< 시도별 배분 >



② [지자체 운영] 매칭 및 자체추진 R&D 집행 + 다양한 거버넌스 형태

- (규모 및 성과) 지자체는 중앙부처 지원에 대한 매칭 및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R&D사업에 대해 1.6조원 투입*('17년 기준)

* 시도별(억원): 경기(1,874), 경북(1,603), 광주(1,332), 경남(1,323), 부산(1,204), 전북(1,114), 대구(1,111), 서울(970), 대전(904), 충북(904), 전남(831), 울산(736), 제주(640), 충남(585), 강원(447), 인천(387), 세종(167)

** 2017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추진실적('18.3월) 기준

- 창의성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 기획·추진으로 자체적인 성장동력 발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산**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예: 광주) GIST와 협업하여 인공지능 산업융합단지 기획 → 예타면제 결정('19.1월 0.4조원)

** (예: 부산) 대학 유희부지 활용 연구단지 조성(5년간 150억원) → 교육부가 동일한 사업 추진

- (거버넌스) 모든 지자체가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실질적인 혁신·R&D 거버넌스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형태

< 지자체별 거버넌스 사례 >

① **별도의 R&D 기획평가기관 운영**

○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R&D전략 수립과 사업기획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산하 **별도 독립기관*** 설치·운영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BISTEP) '15년 설립, 예산 150억원, 인력 59명 규모로 운영 중

** (경기경제과학기술진흥원, GBSA) 과학기술진흥원(GSTEP)으로 설립('10년), 경제분야와 통합하여 예산 2,322억원, 230명 규모로 운영 중

※ 대전, 경북 등에서도 독립된 R&D기획평가기관 설립 검토 중

② **테크노파크(TP) 주도의 거버넌스**

○ TP의 정책기획단과 과학기술진흥센터가 R&D기획, 전략수립, 조사분석 기능을 수행하되 구체적 형태는 지자체별로 상이

- ① 정책기획단이 연구개발지원단 역할을 겸업하면서 산업·과학기술분야 기획·조사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유형
- ② 과학기술분야는 TP 과학기술진흥센터가 별도로 수행하는 유형
- ③ 산업분야는 TP가 주도하되, IT산업·과학 분야 사업기획·전략수립은 별도의 진흥원이 담당하는 유형

< 부처별, 기능별 지역혁신조직 현황 >

기능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전문기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특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획	TP 정책기획단		연구개발지원단
① 부산, 경기	별도 기획평가기관(BISTEP, GBSA)		
②-① 대전, 충남, 세종, 인천, 제주	TP정책기획단이 연구개발지원단 겸업		
②-② 전북, 전남, 경남, 대구, 울산	TP 정책기획단		TP 과학기술진흥센터
②-③ 강원, 경북, 충북, 광주, 서울			과학산업진흥원
집행	TP, 특화센터, 창경센터, 지자체 전담기관, 출연연 분원 등		
R&D 조사·분석	연구개발지원단		
평가	지역사업평가단		연구개발특구재단

2

지역R&D의 문제점

1 [기준부재] 지역R&D의 명확한 정의·범위 등 공식적 기준 부재

- 국가R&D 중 지역R&D의 목적은 대략적 공감대가 형성(지역혁신 지원)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 공간적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부재
 - * (사례) 지방대 재정지원, 수도권 지역 지원이 지역R&D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균특 및 지자체 매칭으로 판단(3.3조원)하는 것은 지역R&D로 보기 곤란한 사업(예: 원자력 개발, 포스트게놈 등)이 포함되어 부적합
 - 지자체의 자체 R&D사업 규모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여러 조사·분석 자료가 발간*되어 혼란스러운 측면
 - * 지방과학기술연감(KISTEP발간): 15,733억원('16년, 매칭비 포함)
 - ↔ 지역R&D 공동조사·분석(연지단 발간): 4,202억원('16년, 매칭비 포함)
- ⇒ 지역R&D 관련 사업목록·규모, 집행기준, 지자체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사실상 불가능

2 [중앙정부 중심] 지자체 참여 불충분 + 부처간 칸막이식 운용

- 각 부처가 전문기관(KIAT 등)을 통해 지역혁신기관에 직접 집행하여 지자체가 사업 전달체계에서 배제
 - 지자체는 전문기관의 집행금액에 대해 매칭비만 부담하는 구조
 - 부처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유사사업이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분절적 추진 중이며, 부처별 지역혁신기관*도 난립
 - *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산업육성, 기업역량 제고 등을 지원하는 기관
 - 지역혁신기관간 연계·협력 플랫폼으로서 구축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혁신지원단*은 역할·권한이 미약한 상황
 - * 균특법에 따라 설치한 시도 산하 심의기구(협의회) 및 사무국(지원단)
- ⇒ 현장에 보다 가까운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 정책기획, 혁신역량 활용 등 현장대응이 곤란하며 재정 비효율도 초래

③ [정책연계 미흡] 중앙-지방간 전략적 R&D 정책 연계 부족

- 지방과학기술 관련 총괄 조정·심의기구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자문회의 산하)는 지역 거버넌스와 연관성 미흡**, 지자체와 괴리
 - * (구성) 지자체 추천 외부전문가 21명(17.12월 위촉, 임기 2년) + 과기정책국장 (기능)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사업조정, 효율적 예산운영 등 심의
 - ** (법령상 위원 자격요건)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지역R&D 관련 주요 부처·기관(산업부, 중기부, 균형위 등) 소속 위원 부재로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지역R&D 정책 논의에도 한계

④ [지역특성 배제] R&D특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 개선·실행 미흡

- 그간 발표된 지역R&D 개선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미흡
- ①지역R&D 특성, ②지자체 수요에 대한 고려 미흡, ③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재정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
 - ① (지역R&D 특성) R&D의 주요 성과인 '새로운 지식'은 확산성 보유 → 지역R&D사업의 혜택이 지역에 한정된다고 보기 곤란*
 - * (지역문화시설) 지역주민에게 혜택 vs (지역산학협력) 생산된 지식의 혜택이 국가 전체로 확산
 - 지역R&D 개선 추진시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및 합리적 역할분담 검토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 미흡
 - ② (지자체 수요)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성장에 큰 관심 → 지역R&D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보다는 산업기술에 근접*
 - * (과학기술) 기초과학, 거대·공공연구 등 / (산업기술) 지역중소기업 생산기술 혁신 등
 - 그간 R&D사업 위주의 개선안 검토로 지자체·지역기업이 원하는 R&D이후 사업화·창업지원 등 비R&D사업과의 연계검토 부족
 - ③ (실질적 지원) 지역R&D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체계 개선방안 등 실질적 재정지원 및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 지역R&D 관련 해외사례 >

- 해외 주요국은 R&D에 한정하지 않고 과학, 산업, 인력양성을 포괄하는 혁신(Innovation) 개념으로 확장된 지역혁신정책 추진(OECD, 2011)
 - 중앙정부는 지식 창출, 지방정부는 지식확산 및 현지 활용에 초점

국가형태 지역의 역할	연방국가	단일국가	
		투표를 통해 지방정부 구성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정부 구성
과학기술혁신 관련 적극적 역할	호주, 벨기에, 독일, 캐나다,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소극적 역할	멕시코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UK(잉글랜드), 스웨덴
역할 미미		포르투갈, 터키, 체코	헝가리, 그리스, 핀란드

* 자료: OECD(2011)

-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구조를 설계하고 주정부가 구체적 지원 집행
 - 주정부가 직접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파트너십 형성
 - 제조혁신연구소(14개, 연방정부 설치)는 혁신생태계의 구심점으로 대학·국책연구소 중심의 기초연구와 기업 간의 연계역할 수행
- (독일) 연방-주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 프라운호퍼연구회(연방-주정부 공동재정지원)가 중소기업과 지역 밀착형 연구를 통해 과학·산업계의 연계 및 산학연 지역이전의 강화
 - * 연방정부-주정부의 공동과학퍼컨퍼런스(GWK): 연구진흥업무의 공동협력 강화('08~)
- (영국)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과 함께 권한과 재원을 맞춤형으로 지역에 이양하는 협약을 통해 지역혁신 추진
 - 기업·과학자·엔지니어의 네트워크인 캐터펄트센터(High Value Manufacturing Catapult Centre, 7개)를 설립하여 제조업 부흥 노력
 - 민관합동 지역발전 기구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39개)를 통해 중앙과 지역간 협약 → 지역 자율성 확대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 실질적 지역R&D 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R&D 관련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협력하는 분권형 체계로 개편
 - 분권대상이 되는 지역R&D 사업 기준을 명확히 설정, 해당사업을 매년 지정·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 확보
 - 지역혁신주체의 지역R&D사업 집행에 대한 참여 확대, 자율성 최대한 보장으로 현장체감형 R&D 지원
 -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 중심으로 R&D·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한·역할 강화 및 중앙과의 연계·협력 확대
- 현행 R&D 지원체계 내에서의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R&D사업과 연계된 비R&D사업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인 체계 마련

추진목표	지역R&D 체계 개편 → 실질적 지역R&D 분권 실현
기본방향	현장에 가까운 지역 주체들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추진 방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1 지역R&D 사업 기준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밀착된 자원 활용 + 지역혁신체계 구축 목적 → 매년 해당사업 목록 관리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2 지역R&D 사업추진 체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R&D사업 전달체계 개편 + 지역 참여 확대 + 지원 확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 지자체 R&D·혁신 거버넌스 공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협의회·지역과학기술위 강화 + 중앙-지방간 거버넌스 연계 </div>

2

지역R&D 기준 정립 및 관리

1 [정의 및 판단기준(안) 지역밀착 자원 활용 + 지역혁신체계 구축

- (정의(안)) 지역에 밀착된 지식기반, 인력, 산업 등을 연계·활용함으로써 지역혁신체계를 구축·강화하는 제반활동
 - ※ 「지역R&D」, 「지방R&D」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수도권/비수도권에 지원되는 사업을 모두 포함

⇒ 정의를 반영하여 국가R&D 중 지역R&D사업 판단기준(안) 제시

[국가R&D 중 지역R&D사업] 목적·분포, 사업내용, 사업효과성 고려

- 법령상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측면에 가까운 사업을 제외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 (지방자치법 제11조 7목)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 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① (목적·분포)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자원배분비율이 지자체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사업
- ② (사업 내용) 지역의 주력·특화산업 육성과 긴밀히 연계되거나 지역기업·대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
- ③ (사업효과성) 지역밀착도가 높아* 지자체가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 * 연구개발 성과물이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용

[지자체 자체 R&D사업] 「OECD Frascati Manual」 분류기준 적용

- 각 지자체가 연구개발지원단 협조를 받아 자체R&D사업 목록 작성
 - 연구개발지원단은 수시로 전국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사업목록 공유 및 분류기준 통일적 적용

② [사업목록 관리] 매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지정

[국가R&D 중 지역R&D사업] 사업유형별 사업 지정·관리

- (기본원칙) 매년 초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거쳐 국과심 본회의에서 사업 지정
 - 세부사업 단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별도 과목구조 개편 건의
 - 지역R&D로 선정된 사업은 균특회계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 (세부분류) 사업유형 및 지자체 주도 추진 적합성에 따른 세부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방안 검토

< 사업유형별 세부 분류(안) >

- ① (지역산업지원) 지역별 주력·특화산업에 대한 지원 및 생산·연구장비 구축 지원사업
 - ② (지역수요기반 기초연구) 지역산업 구조조정,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기술성숙도가 낮은 부문 등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
 - ③ (세부기술분야 지역특화) 농수산, 재난안전 등 세부 기술별 지역특성화 사업
 - ④ (클러스터 구축) 중앙정부가 일정 지구를 지정하고 입주한 기업·연구소 등에게 금융, 재정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
 - ⑤ (산학연 협력지원) 산학연간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 ⑥ (지자체 기획 대규모사업)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기획하여 중앙부처에 제안하고 중앙부처가 사업비를 투입한 대규모 R&D사업(예: 광주 AI단지)
- ※ R&D 인력양성사업은 사업 체계화 추진 결과에 따라 추후 포함

⇒ 지역 자율성이 보다 중요한 유형(예: ①, ②, ③)은 핵심 지역R&D사업, 중앙-지방간 협력이 중요한 유형은 일반 지역R&D사업으로 지정

[지자체 자체 R&D사업]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관리

- 각 지자체가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목록을 결정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공유 → 국과심 보고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해당사업을 R&D로 지정·관리

3 지역R&D 사업 추진 체계 개편(안)

1 [전달체계 개편] 지역R&D사업의 전달체계에 지자체 포함

- 중앙부처가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혁신기관에게 집행하는 체계 검토
 - 지자체는 지역의 지식·산업·인력기반을 연계·활용하는 Grand Plan을 기획*하고 전문기관은 컨설팅·자문역할 수행
 - * 지자체 자율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R&D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기관** 지정
 - ** (예) 독립 기획·평가기관(BISTEP 등), TP 정책기획단, 지역사업평가단, 시도 발전연·진흥원 등
 - 지역 내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 생산·연구장비, 산업·기업현황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통계관리 병행
- ⇒ 관계부처·기관(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균형위 등)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2 [지역 참여·지원 확대] 사업 운영에 지자체 참여 + 지원규모 확대

- (참여확대) 중앙부처 주도적 역할 필요 등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곤란한 지역R&D사업은 운영과정에서 지자체 참여를 최대한 보장
 - 출연연 지역조직 운영, 산학연 협력 사업 등 검토
- (지원확대) 연구개발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대단위 혁신거점 육성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뒷받침

4

R&D·혁신 거버넌스 재정비

① [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 지역과학기술위(R&D분과) 권한 강화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기관간의 연계·협력 플랫폼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권한 부여
 - 지역R&D사업의 집행방향을 결정하고 혁신지원단이 실무 집행
- (지역과학기술위) 지역혁신협의회의 R&D분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향후 지역혁신협의회와 통합 운영 검토

② [중앙]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 개편 + 인사교류 활성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중앙-지방간의 전략적 지역R&D 정책 연계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 개선
 - (중앙정부 소속) 지역R&D 관련 주요 부처(산업부, 중기부) 및 균형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협의회 위원으로 신규 참여
 - (지역 소속) 위원 자격요건으로 해당 지역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명시(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
- (인사교류)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R&D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략적 인사교류 확대 → 중앙-지방간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 도모

③ [정책-예산 연계] 지방협의회-예산전문위 협력 확대

- R&D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문회의 산하 기계·소재 전문위*의 지역 소위에 지역 소속 지방협의회 위원이 지역R&D정책적 의견 개진

* 지역특화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 등 균특회계 R&D사업 심의 담당

IV. 향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범부처 협의체 구성하여 추진

- (검토범위 확장) 지역R&D 사업을 포함한 “연구개발 중심 지역혁신 사업”의 체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기관과 협의 추진
 - 과기정통부·기재부·산업부·중기부·균형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 구성 추진
 - * 지역혁신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방향 既결정('18.8, 혁신성장장관회의)
- (안전 마련)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가칭)지역R&D 체계개편 방안(R&D중심)」, 「(가칭)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비R&D 연계)」 마련
 - 과기장관회의 또는 혁신성장장관회의에 상정하여 논의

2 추진일정(안)

- ('19.4월~5월) 지역R&D 체계개선에 대한 지자체 의견 청취
 - 지역R&D의 개념 및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중점 수렴
- ('19.4월) 기재부 및 균형위 협의 → 연구개발 중심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향에 대한 사전적 공감대 형성
- ('19.4월~6월) 지역혁신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부처간 협의 실시
- ('19.6월) 「(가칭)지역R&D 체계개편 방안」, 「(가칭)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 안전 장관회의 상정
- ('19.7월~12월) 법령개정, 예산반영 등 후속조치 시행

붙임 3

3기 제7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9. 10. 11. (제 7 회)	

지역R&D 체계 개편 경과 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연월일	2019. 10. 11.

지역R&D 체계 개편 경과보고

2019.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 추진배경

- 대내외에서 균형발전 지역R&D 정책 필요성 제기('18.10, 국감 등), VIP께서 지역R&D를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 의지 표명*('19.1)
 - * "지역R&D사업을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하여 지자체가 지역 R&D사업을 기획·제안하고, R&D 수행의 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II. 추진경과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목표로 지역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종합,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수립('18.2)
 - * (3대 전략) ①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② 지역 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③ 지역혁신성장체계 고도화
- R&D 투자방식 개편* 등 구체적인 지역주도 R&D 강화 방안을 포함한 「국가R&D 혁신방안」 발표('18.7)
 - *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지역R&D 재원을 연계·개편, 지역수요에 맞추어 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제6차 지방협의회('19.4)에서 논의한 「지역R&D 체계 개편방안(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역R&D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과기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19.7)

< 「지역R&D 체계 개선방안」 지방협의회 논의 이후 변경사항 >

	지방협의회 논의('19.4)	과기장관회의 논의('19.7)
검토 범위	■ 지역R&D에 집중하여 검토	■ (검토범위 확장) 연관된 비R&D사업 및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지역혁신기관까지 검토
추진체계 개편방향	■ 지역R&D 전달체계에 지자체 포함	■ (방향 구체화) 지역주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가 사업 추진,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체계 도입
거버넌스	■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역할 강화	■ (지자체·균형위 역할 강조) 지자체(지방), 균형위(중앙) 중심의 지역혁신조정체계 구축

III. 향후 추진계획

- 시도별 전문기관 지정, 지역주도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체적인 지역혁신체계 정비 추진(균형위 주관, 과기정통부 협조)

붙임 1 「지역 R&D 체계 개편방안(안)」 주요내용(4월, 지방협의회)

1 지역R&D 기준정립 및 관리

- (지역R&D 정의(안)) 지역에 밀착된 지식기반, 인력, 산업 등을 연계·활용함으로써 지역혁신체계를 구축·강화하는 제반활동*
 - * 「지역R&D」, 「지방R&D」는 동일개념으로 간주 + 수도권/비수도권에 지원되는 사업 모두 포함
- (사업목록 관리) 매년 초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거쳐 국과심 본회의에서 지역R&D 사업 지정

2 지역R&D사업 추진체계 개편

- 지역R&D사업 전달체계에 지자체가 포함되도록 개편
 - 중앙부처가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 → 지자체는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혁신기관(TP,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협력단 등)에 집행
 - 지자체 주도로 지역단위 Grand Plan 기획 및 조사분석·통계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자율적 지정
 - * (예) 독립된 기획·평가기관, TP정책기획단, 지역사업평가단, 시도발전연 등



3 R&D·혁신 거버넌스 재정비

- (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권한·역할 강화
- (중앙)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중앙-지방간의 전략적 지역R&D 정책 연계 허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 개선

붙임 2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7월, 과기장관회의)

1 지역혁신기관 및 사업 기준 설정

- 지역혁신기관은 지역밀착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기관·조직, 지역 혁신사업은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지역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역R&D·혁신사업 연계·활용 체계 도입

◇ 중앙-지방간 협력에 기반한 지역주도 「종합계획*」을 수립 →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가 사업 추진, 중앙부처가 지원

* (가칭 「지역혁신종합계획」) 역내 지식·산업·인력기반과 지역혁신기관·사업을 부처 구분 없이 연계·활용하는 지역단위 총괄계획

- (계획수립) 중앙은 기본방향 제시, 시·도는 구체적 계획 작성
 - (중앙) 지역혁신기관·사업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획체계를 구성하여 공표하고, 시·도 제안사업(과제)을 검토하여 의견 통보
 - (시·도) 수립지침 및 중앙부처의 개별사업(과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각 시·도 재량으로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기획·관리, 자체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자율적으로 지정·운영
- (사업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및 지역혁신기관이 구체적 과제 선정 후 지역 주도적으로 사업 집행, 중앙부처가 지원
- (평가·환류) 지역 전문기관을 통해 지역혁신기관·사업을 자체 평가하고 차년도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혁신기관 역할에 반영

3 지역 R&D·혁신 거버넌스 재정비

- (지방) 각 시·도 및 지자체에 설치한 지역혁신협의회가 「종합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어 역내 지역혁신 총괄·조정자로 자리매김
- (중앙) 균형위 중심 중앙부처간 지역혁신 조정체계를 활성화하고 중앙·지방간 공무원 및 전문기관 연구자 교류 확대 추진

붙임 4

3기 제7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9. 10. 11. (제 7 회)	

'20년 지역R&D 예산 관련
지방협의회 의견 제시 결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연월일	2019. 10. 11.

'20년 지역R&D 예산 관련 지방협의회 의견 제시 결과

2019.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 추진배경

- (개요) 지역정책과 R&D예산 연계 및 지방협의회 기능* 수행을 위해 R&D예산 배분·조정에 지방협의회 위원 참여 절차 시범 운영
 - * (자문회의법 제7조제3항) 지방과학기술관련 국가R&D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국과심 지역소위(기계·소재 전문위 산하)에 배석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지역정책적 측면의 의견 제시

< 평가항목 >

- ①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과의 정합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학기술정책방향과 연계성)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 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 ②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지역 특화산업·전략분야 기술 확보, 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등
- ③ 종합의견

- (추진경과) 사업설명회 일정 공유 및 참석자 조사를 거쳐 지방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2인 참석*(5.15)
 - * 김미혜 위원, 조유섭 위원 참석 (기계소재 전문위원장 겸직 중인 김민선 위원도 참석)
- 3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주요 지역사업(11개*) 설명 청취 후 지역정책적 측면의 검토의견을 R&D투자심의국에 전달(5.17)
 -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육성,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연구성과기반BIG선도모델구축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 국가융복합단지 연계상용화, 산학협력 거점형플랫폼 (산업부) 산업집적지,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역대표중견기업, 사회적경제, 지역제조서비스
- 지방협의회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R&D예산 편성·조정 결과 국과심 의결 및 기재부 통보(6.28) → '20년 정부예산안 국회제출(9.3)

II. 지방협의회 검토 의견 개관

-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제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전반적으로 사업규모 확대 의견 제시
 - 검토대상인 R&D사업 외에 비R&D사업에 대한 확대도 제안
 - R&D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R&D사업*, R&D보다는 비R&D 지원이 적합한 수혜대상 지원** 등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R&D(중기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산업부) 등
 -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산업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비R&D 중심이 바람직
- 다수의 사업에 대해 부처간 협력 및 사업간 연계, 산학연간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확대를 통한 예산 운영 효율화 강조
 - 다만, 이미 상당수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확대 지양 의견 피력*
 -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산업부) 통해 지원하는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III. '20년 정부예산안 결과

- 전년대비 R&D분야 대폭 증가(20.5 → 24.1조원, +17.3%) 영향으로 검토 대상 11개 사업 예산 모두 전년대비 증가(미반영 신규사업 제외)
 - 특히 지역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특구(과기부), 지역 특화산업(중기부), 지역혁신클러스터(산업부) 사업 대폭 증가
 - * (연구개발특구육성) '19년 734억원 → '20안 935억원 (+27.5%)
 - (지역특화산업육성) '19년 465억원 → '20안 974억원 (+109.5%)
 - (지역혁신클러스터) '19년 635억원 → '20안 775억원 (+22.1%)
 -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 산학연 연계 등을 위한 신규사업*, 일몰 대응 대체 사업** 등도 다수 반영
 -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과기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산업부) 등
 - ** 지역특화산업육성+,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중기부) 등

IV. 지방협의회 검토의 의의 및 평가

- 재정여건, 정부 전체 정책방향, 대내외 환경변화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정책도 고려되도록 한 점에 의의
 - 전문위 중심의 R&D 예산심의 구조 하에서 각 부처 사업설명회부터 참석하는 절차를 운영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음
 - 제시한 검토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편성된 사업도 있으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예산의 특성상 불가피한 현상

사업명	지방협의회 의견	편성내용
사회적경제혁신성장	■ 사회적기업은 직접R&D보다는 비R&D 지원 확대가 바람직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확보를 위해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지역제조서비스	■ 사업비 증액하여 전국확대 시행필요	■ 지역주도 사전기획이 필요하여 미반영

- 다만, 시간상 제약* 등으로 지방협의회 전체 의결을 거치지 못한 비공식적 의견 전달이었다는 점에서 한계

* 수많은 사업을 심의·조정해야하는 전문위 특성상 일정이 급박하고 가변적

V. 향후 지방협의회 운영 보완 방향

- 법령상 권한·기능 수행*을 위해 매년 5월중 지방협의회 개최 정례화
 - * (자문회의법 제7조제3항) 지방과학기술관련 국가R&D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예산요구서 접수 후 검토대상 사업의 설명자료를 협의회 내에 사전공유하고 효율화방안 초안 마련(혁신본부 과기정책국, KISTEP)
 - 각 부처 사업설명회 참여(배석)은 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
 - 지역정책을 반영한 예산 효율화 방안 및 사업별 검토의견을 의결하고 전문위에 공식 전달
- 정부안 제출(9.3일) 후 검토대상 사업 편성 결과 서면 또는 대면 보고

붙임 1 사업별 검토의견 및 예산 반영 결과 개관

(백만원)

사업명 (담당부처)	지방협의회 주요 검토의견	'19년 예산	'20년 정부안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육성(R&D)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보완·개선이 요구됨 강소특구 확대지정 필요 	73,377	93,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소특구 사업화 본격 지원을 위해 149억원 반영('19년 16억원) '20년에도 신규 강소특구 지정 지속 추진 계획
○ 지역연구개발 혁신지원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지단 및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강화 필요 지역R&D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전담기구 지정, R&D정보시스템 의무화 등 필요 	9,864	13,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속 지원, 지역성장동력창출 등을 위한 신규내역 2개 반영(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기 프로젝트, 지역산업 연계 대학 Open-Lab 육성) ※ 지역 전담기구 지정, R&D 정보시스템 구축은 균형위주관으로 별도 추진 중
○ 연구성과기반 BIG(Big Innovation Gap)선도 모델구축운영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주체(산학연금)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 지역산업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미래신산업 테마발굴 중요 	-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혁신성장주체간 그랜드 컨소시엄 운영 및 기술창업법인 설립 지원 신규반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서 계속 지원과 사업규모 확대 필요 	-	97,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19년 46,497백만원) 일몰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예타 면제 및 사업규모 대폭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 산업 지원 및 지역별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 투자
○ 국가융복합 단지 연계 상용화R&D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R&D 사업 확대 및 연계 필요 경제협력권사업(산업부), 지역특화사업(중기부)과 연계한 계획수립 필요 	12,300	12,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사업 종료,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백만원)

사업명 (담당부처)	지방협의회 주요 검토의견	'19년 예산	'20년 정부안	주요내용
○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R&D 지원체계 구축 필요 연구소가 없는 기업에 대해 대학·연구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기반 지원형 R&D 확대 필요 	-	6,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일몰예정인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신규사업 중 하나로 추진 산학협력 희망기업 대상 전문가 매칭 및 기술역량 분석 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수행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제조환경 구축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니클러스터 구성 확대는 지양 	62,294	63,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니클러스터 구성·운영은 기존수준으로 지원(10,350 백만원)하고 기업간 공동 협업 프로젝트 R&D로 전환 지원
○ 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공공기관 연계육성과 비R&D사업 확대지원 필요 일몰관리 혁신에 따라 사업기간 2년연장 불가피 	63,499	77,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2년 연장, 지역별 성장거점 육성 및 이전공공기관 연계를 위해 전년대비 사업규모 대폭 확대(+ 22.1%)
○ 지역대표 중견기업육성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표중견기업중심 산학연 공동프로젝트 집중 발굴 필요 지역스타기업, WC300 사업과 지원대상 차별화 	2,015	2,4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수요기반 R&D를 지원하되, 집행실적, 신규 과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요구대비 감액반영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은 직접R&D 수행보다는 비R&D사업을 확대하고 R&D는 혁신기관 주관이 바람직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생태계 분석 필요 	-	6,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혁신기관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되, 요구대비 규모 다소 조정하여 반영
○ 지역제조 서비스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제조서비스와 연계한 R&D 추진으로 사업비 증액하여 전국 확대 시행 필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의 충분한 사전 기획이 필요하여 미반영

붙임 2 사업별 세부 검토의견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과기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견
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별 기술 산업 혁신기반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판단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취지와 목적은 지역과기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 - 강소특구의 지정조건(지역당 2km²), 정량·정성 조건이 부합할 경우 신청 지역 모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 - 강소특구의 당초 목적상 기술 핵심기관이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모두 지정하는 것이 타당
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도 현안 문제와 지역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와 사회적 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할 여지가 적정함 -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차원의 공동 지원이 필요 - 기술이전 통한 사업화 지원과 창업 지원은 지역혁신역량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지원과 같이 초기 사업시행 단계의 특성상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보완·개선 사항이 요구됨 -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과 연구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특구 지원은 지역혁신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강소연구특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구로 모두 지정(기존 5곳 연구개발특구 규모 고려) -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특구 확대 지정 필요하며, 기술 보유 핵심기관 중심 강소연구특구의 총량제 폐지가 바람직함 	

사업명: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과기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건
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비전에 부합하는 지역 R&D 정보관리와 과학기술 기반 지역의 실천계획을 위한 지역주도 R&D 리스트화를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에 타당 -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이라는 지역과기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 - (문제점)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R&D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로 운영 중에 있으나, R&D 분야 조사권한 부재로 범부처 R&D에 대한 DB구축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R&D DB는 수요조사에 의존 - (개선방안) 지역 R&D사업 관리 전담기구 지정
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 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과학기술 기반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됨 - (문제점) 정부와 지자체의 R&D 예산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투입 예산대비 성과도출의 정확성 부족 - (해결방안) 지역 R&D사업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일부 지자체(대구 등)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R&D사업 수행현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R&D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 지역별 기 구축된 R&D정보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② (R&D현황 등록 제도화)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는 R&D사업 현황을 R&D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시행 * 지역 R&D정보시스템 외 정부 구축 시스템(NTIS) 기능확대 동시 검토 필요
3.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기술 등 수요 맞춤형에 의한 실천계획 수립과 지역내 산·학·연 연계 협업을 지역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기여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견
	<p>할 수 있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과 기업 수요 맞춤형 R&D 지원 강화 필요 - 지역 R&D의 기획과 조사분석을 위한 지역 R&D 거버넌스 구축 - 정부차원에서 데이터 기반 지역 R&D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지자체 R&D사업 현황 관리를 위한 지역 전담기구 지정 - R&D사업 현황 관리를 위한 수행사업 R&D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명: 연구성과기반BIG(Big Innovation Gap)선도모델 구축운영(과기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건
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협력 활성화 후속사업으로 기존 R&D 결과가 단순 기술이전과 소수의 해당 주체의 역할로 되어 있던 사업을 지역의 주체기관들과의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지역의 R&D 질적 성과의 우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 취지와 목적은 지역과기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 - 연구성과기반 BIG 선도모델 발굴하여 R&D와 사업화를 동시 지원으로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됨
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지역 성장기여도가 높은 아이템 발굴과 창업 및 고용창출 등 지역의 과학기술사업화 효과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 산학 친화형 선도모델 구축 필요 - 지역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식클러스터 구축 필요 -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주체가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 구성 필요
3.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체(산학연금)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역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산업 테마 발굴이 중요 - R&D와 비R&D 동시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됨 	

사업명: 지역특화산업육성+(중기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건
<p>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R&D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 연구사업을 기존 사업에서 제외하고 - R&D를 주력산업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 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이라 판단 - 지역과기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지역산학연 공동 연구활성화 과제) -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 - (범부처 연계) TRL단계에 맞춘 부처 연계형 사업기획 필요 *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한 범부처 패키지 지원사업 발굴 필요
<p>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하여 저변 확대와 타겟형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사업 계획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역량제고에 효율적이라고 판단 - (산업 중복성) 지역별 산업기반, 산업육성 의지 등에 따른 일부 중복성은 허용하되 조성된 인프라를 전지역 기업들이 범용 활용할 수 있는 수단 개발 필요 * 지방비 매칭에 대한 지역간 사용 일부 허용 필요 - TP 등 지역내 특성화된 지원 기관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하되 지역별 차별화된 기능 부여 필요 - 국비는 지역구분 없는 기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
<p>3. 종합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지자체별 수립된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중소기업의 수와 지역 경제를 고려한 차등 지원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19년 일몰)은 그 동안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성장 지원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 “지역특화육성사업+” 사업의 계속 지원과 사업규모 확대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지역산업 육성의 발판이 되어야 함 -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자율 기획/집행으로 확대 필요하며, 일부 지역내 혁신역량/기업수 등에 따라 일반회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명: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R&D 지원(중기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건
<p>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내 입주 기업만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 - 혁신도시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산업육성과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p>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기업 단독의 소규모 Bottom-up 방식 지원 중심 - 반면 산업부의 경우 대단위 컨소시엄의 Top-down 방식의 대형과제 지원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Network 구축 필요 - TP 등 지역 내 특성화된 혁신기관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하되, 지역별 차별화된 기능부여
<p>3. 종합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융복합단지를 새로운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Network 사업 등 비R&D 사업의 확대 및 연계가 필요함 - 현재는 지원 분야를 혁신도시 전략산업분야 1개에 한정하고 있어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 특화분야 확대 지정 필요 - 산업부 경제협력권 및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과 연계한 국가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수립이 요청됨 	

사업명: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구축운영(중기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건
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의 의지는 있으나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171개 대비 비수도권 304개(64%) 비율의 지원으로 균형 발전 정책에 부합된다고 판단 - 지방과기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지역거점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과제)
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역량 초기기업의 체계적지원과, 비수도권에 64% 이상 지원 등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 - 실질적인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 필요 -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산학연 R&D지원체계 구축 필요
3.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중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한계 극복과 고급 인력 수급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산학협력이 매우 중요 -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야... -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R&D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의 경우, 대학과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기반 지원형 R&D 확대 필요 	

사업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21년 일몰)(산업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견
<p>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사업과 달리 산단별 특화된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차별적 지원 대상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 정책에 기여한다고 판단 - 지방과기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지역혁신성장 체계 고도화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과제)
<p>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유사 사업대비 과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과제 경쟁률을 높이고 많은 참여를 통해 지역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보다 도전적인 R&BD 네트워크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전담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혁신기관 참여 필요 - 지역혁신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Network 구축 필요
<p>3. 종합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동안 산업 입지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거점 기능 수행 - 산업단지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혁신 클러스터로 발전 도모가 필요 - '21년 일몰 대비 스마트혁신클러스터 도약 사업 사전 기획 필요 - 전담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요구됨(혁신기관 참여 유도) -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 제조 R&D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니클러스터 구성 확대는 지양 	

사업명: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계속)(산업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견
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시·도에 동일 금액으로 균등 지원하여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의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 가속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됨 - 이전 공공기관연계 육성을 위한 지역 공공기관 및 산·학·연 공동 연구 활성화 사업이라 판단됨 - 균형발전 정책과 정합(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연계) 혁신도시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범부처의 추진체계 일원화가 필요 * (산업부)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타워 재단 - (지역간 균형발전) 클러스터와 동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이전 유치가 필요함
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기반의 대규모 R&D 지원 사업을 통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기관과의 유기적 관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 - 글로벌 클러스터와 연계를 위해 지역 클러스터에도 글로벌 클러스터와 연계를 위한 역량을 확보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관 이전 및 코어기업의 유치를 위한 역량 집결이 필요함 -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외 지역산업과 연관된 R&D/인증 기관 간 긴밀한 연계방안이 필요
3.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새로운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과 비R&D사업 확대 지원 필요 ○ 혁신도시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와 기존 산업중추도시 연계형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필요 ○ 국가혁신융복합추진단 설립 강제화 필요(현재 산업부 고시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 일몰시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 지속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 관리 혁신에 따라, 사업기간 2년 연장 불가피함 	

사업명: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세종)(신규)(산업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견
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지역에 균등지원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과 이전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은 세종특별자치도의 육성 기여에 의미가 있음
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3. 종합의견		

사업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산업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건
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사업·경제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의 대표중견기업들 간의 R&D 역량 보전을 위한 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기업의 기술 역량확보의 9대 추진과제에 부합 -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와 지역 중견기업 중심 산학연 공동 연구활성화에 기여 - 중견기업 중심 특화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소재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산업의 R&D 역량보전을 통하여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에 의미 있다고 판단 - 유망 중견기업 중심 산학연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지원 대상 기업 명확하게 정의 필요
3.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의 잠재성이 큰 중견기업의 지원으로 균형발전과 지역의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될 것이라 판단됨 - 지역 대표중견기업 육성으로 중견기업 중심 특화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글로벌 경쟁력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 신기술 및 핵심제품 개발을 위한 지역 대표 중견기업 중심 산학연 공동프로젝트 집중 발굴 필요 - 지역스타기업과 WC300 사업과의 지원대상 차별화 명확하게 - 지역 대표 중견기업 중심 산학연 프로젝트 집중 발굴·육성 필요 	

사업명: 2020 사회적경제혁신성장(신규)(산업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견
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체적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기술성장 지원과 종합적인 성장단계 지원사업 -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 발판으로의 활용을 통해 수혜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균형발전에 기여함 -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공동체 동반 상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고도의 기술사용을 공용화하여 기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기관간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3.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경우 직접 R&D 수행 보다는 비R&D 사업을 확대 하고, R&D는 혁신기관(연구원 혹은 대학) 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 혁신클러스터 세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몰되기에 신규사업 추진 필요 - 지역사업 생태계 내 보완관계가 있는 기업 간 공동 커뮤니티 구성 필요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생태계 분석 필요 	

사업명: 2020 지역제조서비스(신규)(산업부)

'20년도 예산 배분방향	평가항목	검 토 의 건
1. 지역 과기혁신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차원의 사업설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지역과기정책방향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대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의 사업 기여도 평가와 사업개선방향 ○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제조업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신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이 높다고 판단 - 국정과제에 제조업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포함 - 전통적인 지역 주력산업에 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지역혁신 생태계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역량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분야·전략분야 기술 확보, R&D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등에서 기여도 평가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 ○ 지역내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양한 R&D거점기관과 연계·협력방안 제시,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 내 추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사업 개선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역 제조업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연계된 R&D 신규 추진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라 판단 - 제조서비스 R&D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제품 개발 후 사후관리(AS 등 서비스)까지 R&D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까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3.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제조 서비스와 연계한 R&D추진으로 사업비 증액하여 전국 광역 시도에 확대 시행 필요 - 제조 서비스를 융합한 신 Business Model 발굴 필요 - 서비스 영역 지원을 담당할 혁신기관 육성 필요 	

참 고 2020년 예산안 주요내용

1 2020년 예산안 모습

□ '20년 총지출은 **513.5조원 (+9.3%)**

- 국내외 경제상황, 세입여건, 세출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총지출 증가율(%) : ('18) 7.1 ('19) 9.5 ('20안) 9.3%

□ '20년 총수입은 **482조원 (+1.2%)**

-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둔화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1.2% 증가

□ 세입 증가세 둔화로 **재정수지·국가채무 전년대비 증가**

-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악화** ($\Delta 1.9 \rightarrow \Delta 3.6\%$)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증가** (37.1 \rightarrow 39.8%)

* 적자국채 발행규모(순증, 조원): ('19) 33.8 \rightarrow ('20안) 60.2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총지출 (증가율)	469.6	475.4	513.5	43.9 (9.3)
◇ 총수입 (증가율)	476.1	476.4	482.0	5.9 (1.2)
· 국세수입 (증가율)	294.8	294.8	292.0	$\Delta 2.8$ ($\Delta 0.9$)
◇ 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37.6$ ($\Delta 1.9$)	$\Delta 42.3$ ($\Delta 2.2$)	$\Delta 72.1$ ($\Delta 3.6$)	$\Delta 34.5$ ($\Delta 1.7\%p$)
◇ 국가채무 (GDP 대비 %)	740.8 (37.1)	731.5 (37.2)	805.5 (39.8)	64.7 (+2.7%p)

2 분야별 자원배분

구 분	'19년(A)	'20안(B)	(조원)	
			증감 (B-A)	%
◆ 총지출	469.6	513.5	43.9	(9.3)
1. 보건·복지·노동	161.0	181.6	20.6	(12.8)
※ 일자리	21.2	25.8	4.5	(21.3)
2. 교 육	70.6	72.5	1.8	(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2	55.5	0.2	(0.4)
3. 문화·체육·관광	7.2	8.0	0.7	(9.9)
4. 환 경	7.4	8.8	1.4	(19.3)
5. R&D	20.5	24.1	3.6	(17.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9	5.2	(27.5)
7. SOC	19.8	22.3	2.6	(12.9)
8. 농림·수산·식품	20.0	21.0	0.9	(4.7)
9. 국 방	46.7	50.2	3.5	(7.4)
10. 외교·통일	5.1	5.5	0.5	(9.2)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0.8	(4.0)
12. 일반·지방행정	76.6	80.5	3.9	(5.1)
※ 지방교부세	52.5	52.3	△0.2	(△0.3)

3 R&D 분야 주요내용

- ◇ 소재·부품·장비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 Data.Network(5G).AI. 및 3대 핵심사업 집중투자로 혁신성장 확산
- ◇ 기초연구, 중소기업 R&D 확대 및 R&D 기술의 사업화 등

-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강화
 -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와 既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
 - *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총 15,723억원, '20년 1,581억원)
 - *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총 2,637억원, '20년 130억원)
 - 국내 기술 신뢰도 향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확충 등 기반구축
 - * 공공나노팜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723억원), 소재부품지원센터(15개) 기반구축(990억원)
- D.N.A.(Data, Network(5G), AI)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과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위해 3대 핵심사업 투자확대
 - 데이터·AI 융·복합 기술개발·실증과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확대
 - *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신규 139억원) / AI 대학원 : ('19) 3 → ('19 추경) 5 → ('20안) 8개
 -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선도기술 확보 및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
 -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신규 891억원)
 -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국가 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바이오헬스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데이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신규 150억원)
 - (R&D)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신규 938억원), 치매극복 연구개발(신규 59억원)
 - 미래차 조기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 *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 (총 3,856억원, '20년 390억원)

-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 및 혁신연구, 中企 R&D 등 투자확대**
- 자율적·창의적 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기초·원천 및 산업분야 혁신적 도전형 R&D 프로젝트 지원
 - * 개인기초 연구(과기부) : 9,796 → 12,408억원 / * 집단연구지원 : 2,210 → 2,789억원
 - *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 : 35억원(신규) /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 : 118억원(신규)
 - 중소기업 혁신 지원, 기업규모 및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R&D 지원 등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확대**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1,055 → 2,651억원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3,733 → 4,790억원
-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용 촉진**
- 지역별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대학의 실험실에서 보유한 고급기술 기반 창업 촉진
 - * 실험실창업지원 : 110 → 242억원 / * 연구개발 특구육성 : 734 → 935억원
 - 미세먼지 원인규명 고도화 및 저감기술 투자확대 및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R&D 투자 강화
 - *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45억원(신규) / 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45억원(신규)

(억원)

구 분	'19	'20안	비 고
· 과학기술 부문	63,732	72,078	· 개인기초연구(과기부)(9,796→12,408)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2,525→3,63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44,867	57,630	· 소재부품기술개발(2,360→6,027)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640→1,834)
· 교육 부문	20,392	23,035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2,177→3,374) · BK21 플러스사업(1,484→1,920)
· 사회복지·보건·환경	9,391	10,431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255, 신규)
· SOC 부문	7,973	8,783	· 스마트건설기술개발(225, 신규) · 스마트자동차 향만 상용화 술개발(30→220)
· 기타 부문	58,975	68,916	· 보라매(6,642→10,403)
합 계	205,328	240,874	17.3% 증가

붙임 5	4기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	-------------------------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0. 1. 20. (제 1 회)	

<h2 style="margin: 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현황 및 2020년 운영계획(안)</h2>
--

<p>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p>
--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연월일	2020. 1. 20.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현황 및 2020년 운영계획(안)

2020. 1.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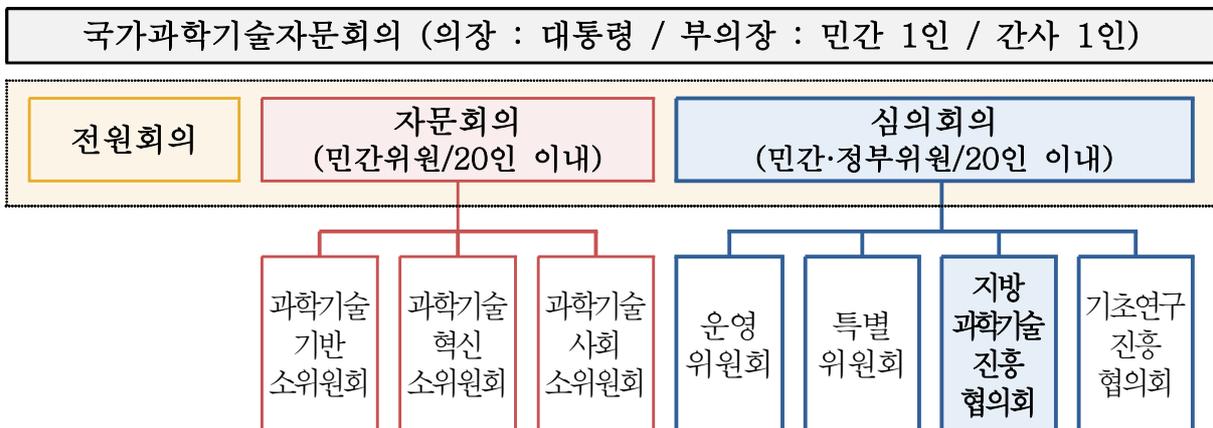
1 [법적 기능]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조정

- * (근거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 제3항
- 지방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현재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8~’22)」 기간(‘17.12월 지방협의회 의결)
- 중앙부처·지자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R&D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자체간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2 [구성]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시·도별 외부전문가로 구성

- (조직구성)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체** 중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회의의 산하 협의회
 - * 종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합하여 출범(‘18.1)
 - **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성
- (위원구성) 각 지자체(시·도)의 추천을 받아 과기정통부장관이 위촉한 지역별 외부 전문가(임기 2년)와 정부위원(과학기술정책국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체계도 >



II. 지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실적('17.12~'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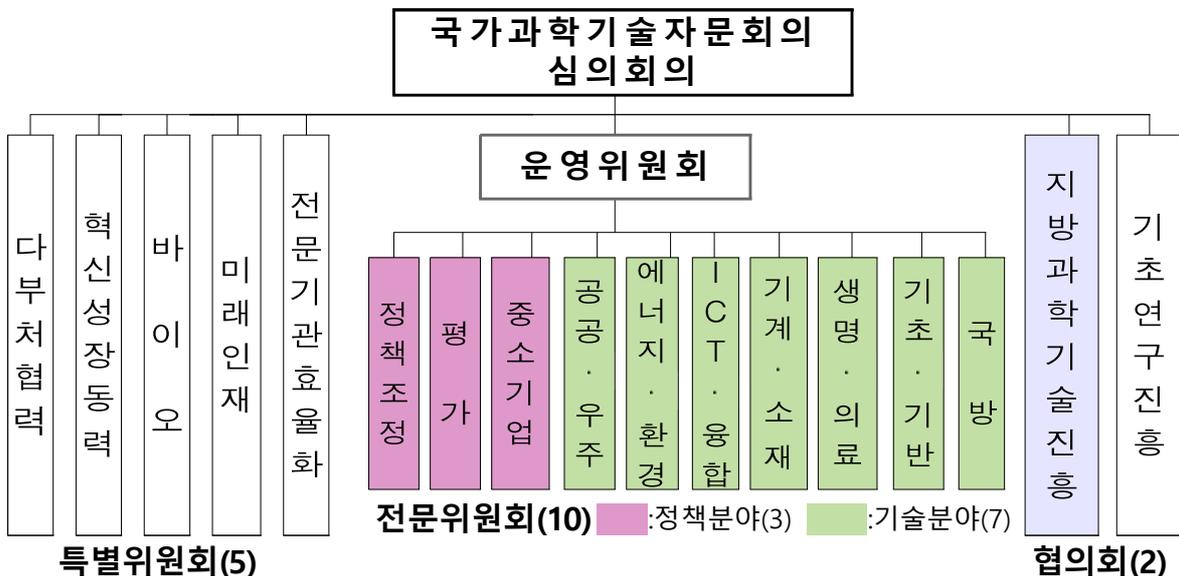
1 [전체회의] 2년간 총 7차례(서면회의 2회 포함) 개최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심의('17.12)하고, 매년 각 시·도의 종합계획 추진실적·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심의·확정
- 지역R&D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중앙-지방 연계 강화 등 정책추진 체계 정립에 앞서 지역R&D 사업 실태 심층분석 수행('18.10)
 - 사업단위로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단위로서 전북을 분석
-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분권형 혁신성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지역R&D 체계 개편 방안」 논의('19.4)
 - 지방협의회 논의 이후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과기장관회의('19.7)에서 논의·확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행 중

2 [분과회의·활동] 심층분석 TF 운영 및 R&D 예산 설명회 참여

- 지역R&D 사업 실태 심층 분석을 위해 지방협의회 위원 7명으로 TF를 구성하여 심층 논의 (총 3차례 회의 개최)
- 지역R&D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기계·소재 전문위 지역소위에 위원 2명이 배석하여 사업설명 청취 및 지역정책적 측면 의견 제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세부 체계도 >



Ⅲ. 2020년 운영 계획(안)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9년 추진실적 및 '20년 시행계획 심의(3월초)
 - 현재 각 시·도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정리 중
(혁신본부 과기정책국, KISTEP)

- 지역R&D 사업 '21년 예산안에 대한 지역정책적 의견 제시(5월중)
 - 예산요구서 접수 후 검토대상 사업의 설명자료를 협의회 내에 사전공유하고 효율화방안 초안 마련(혁신본부 과기정책국, KISTEP)
 - 기계·소재 전문위원회 협조를 거쳐 각 부처 사업설명회에 일부 위원 배석('19년 사례 고려시 2명 배석 가능 예상)
 - 지역정책을 반영한 예산 효율화 방안 및 사업별 검토의견을 의결하고 전문위에 공식 전달
 - 정부안 제출(9.3일) 후 검토대상 사업 편성 결과 서면 또는 대면 보고

-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 및 각 지역에서 제기한 내용 등에 대해 논의(수시)

참고 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실적('17~'19)

회차	개최일	안건	결과
1	'17.12.12.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원안의결
2	'18.3.14. (서면)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7년도 추진실적 및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원안의결
3	'18.6.29.	「지역 R&D사업 효율화를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계획(안)」	원안의결
		2019년 주요 지역 R&D 사업 등 지역R&D 사업 검토 현황	보고
-	'18.7.13.	(심층분석 TF 1차회의) 대상사업·지역 및 분석틀 검토	-
-	'18.8.17.	(심층분석 TF 2차회의) 분야별 전략성 및 성과 검토	-
-	'18.9.14.	(심층분석 TF 3차회의) 정책 및 성과평가 체계 토의	-
4	'18.10.25.	지역 R&D 사업 심층분석 결과(안)	보고
5	'19.3.14. (서면)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원안의결
6	'19.4.5.	지역R&D 체계 개선방안(안)	보고
-	'19.5.15.	기계·소재 전문위 예산설명회 참석	-
7	'19.10.11	지역R&D 체계 개편 경과 보고	보고
		'20년 지역R&D 예산 관련 지방협의회 의견 제시 결과	보고

참고 2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 및 주요 회의체

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기능)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을 수행
- (구성) 의장 포함 과학기술혁신 관련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 등
 - (의장) 국무총리 / (부의장) 과기정통부 장관
 - (위원) 과기혁신 관련 12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기보좌관
 - *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 (간사위원)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 (개최시기) 매월 1회 개최 원칙(의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주재)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성격) 대통령 직속 자문·심의기구
- (근거)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 (기능)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계획·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구성)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의장) 대통령 / (부의장) 민간위원 중 의장이 지명
 - (위원) 의장이 위촉하는 과학기술·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 전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 (회의체)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성
 - 자문회의는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심의회의는 산하에 운영위/특별위(5개)/협의회(2개)를 두고 있음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